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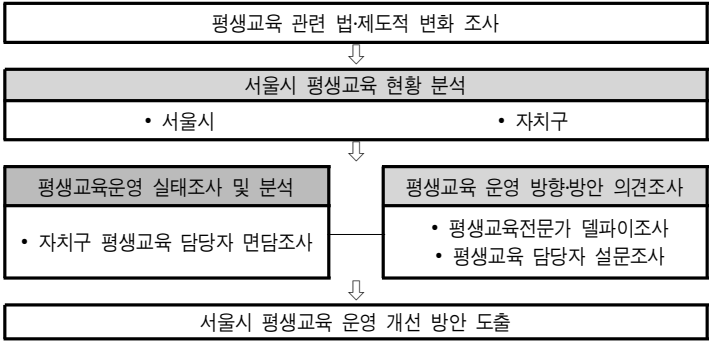
요약 및 정책건의

I. 연구의 개요

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

-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(2007.12)으로 시·도 교육감에게 있던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·도지사에게 주어지면서,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이 요구됨.
-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시는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,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함.
- 그간 서울시가 직업훈련 등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해왔으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미비하였으며, 현재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충분하지 않음.
- 이 연구는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평생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서울시의 평생교육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
2. 연구의 체계



〈그림 1〉 연구의 체계

II. 평생교육법 개정과 서울시의 역할

1.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

-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정비
 - － 평생교육진흥원, 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, 시·군·구 평생학습관으로 전담 추진 기구가 변경·조정되었으며,
 - － 중앙, 광역, 기초단위에 협의기구인 평생교육진흥위원회, 시·도 평생교육협의회, 시·군·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함.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 조항 강화
 - 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책임을 더욱 강조(평생교육법 제1조)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·추진하는 임무를 규정하고,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함(평생교육법 제5조).

2. 서울시의 역할

-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서울시의 역할
 - －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
 - －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운영
 - －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설치·운영
 - － 평생교육 통계조사 실시 등

Ⅲ.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분석

1.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

- 추진 체계
 - － 추진 전담조직은 서울시 경영기획실 교육기획관 평생교육담당관의 3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 - － 법·제도적 지원체제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(2009. 3)하고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(2009. 3)하여 운영함.
- 평생교육 추진 사업
 - － 전담조직인 평생교육담당관은 9억 7천 9백만원의 예산으로 신소의 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,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과 지역 간 협력사업, 시민제안 평생교육프로그램(우수프로그램, 학습동아리) 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함.
 - － 여성가족정책관, 경쟁력강화본부, 복지국, 문화국, 푸른도시국 등에 서도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.

2. 자치구 평생교육 현황

- 추진 조직
 - － 전담조직인 평생교육팀은 25개 자치구 중 22개 구에서 구성되었으며, 평생교육사는 11개 구에서 총 15명을 배치함.
 - － 법·제도적 지원체제인 조례는 서초구, 동작구를 제외한 23개 구에서 제정하였으며, 평생교육협의회는 18개 구에서 구성함.
- 평생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
 - － 평생교육 예산과 시설에서 자치구 간 격차가 매우 큼.
 - － 프로그램은 교양·문화·여가교육 강좌가 대부분(66.4%)임.

IV.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실태 및 개선요구 분석

1. 운영 실태 분석

- 운영방식 및 운영 프로그램
 - － 많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강사섭외부터 프로그램 관리까지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.
 - － 주로 교양·취미·여가 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고, 각 구는 구민대학과 학관사업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때론 네트워크사업, 주민자치센터거점화 사업 등의 특색 사업도 추진함.
-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
 - － 다른 부서와의 연계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기반이 닦인 구를 제외하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, 관련기관 간 연계 역시 마찬가지임.
 - － 대학과의 연계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루어지지만, 교육청과의 연계는 거의 없으며 매우 힘든 상황임.
-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
 - － 예산과 인력 부족, 시설·장소 등 인프라의 부족, 추진 시스템의 부재, 프로그램 개발과 제반 관리에서의 어려움,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남.
- 운영 성과와 한계
 - － 전담부서 설치,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저변 확대,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, 대학 연계 관학 사업 추진 등의 성과가 있으나,
 - － 수요층이 주로 시간 사용이 용이한 집단 등 특정 층에 한정되어, 평생교육의 확산이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노정함.

2. 개선 요구 분석

○ 델파이 조사 결과분석

- 서울시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해야 할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, ‘평생교육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’이 40.0%로 1순위 응답에서 가장 높았으며, 2순위 응답에서는 ‘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’이 40.0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-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, ‘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’과 ‘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 행정서비스 체제(교육, 고용, 복지) 구축’이 각각 26.7%로 1순위 응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○ 설문 조사 결과분석

- 서울시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해야 할 과제로 각 문항 간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는 ‘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’이 28.6%로 1순위 응답에서 가장 높았으며, 2순위 응답에서는 ‘평생교육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’이 22.1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-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을 우선순위로 조사한 결과, ‘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(예: 자치구간 갈등 사안, DB 구축 등)’가 24.7%로 1순위 응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.

○ 조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

- 평생교육기관 간 또는 관련 부서 간 연계와 협력이 수월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.
 - 부서 간 연계 활성화 또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팀의 업무 및 기능을 개편 또는 확대할 것을 시사함.
- 시설 및 장소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자치구에 대하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-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인 일반 행정직이나 평생교육사 모두 낮은

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특히 잦은 이동으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,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바람직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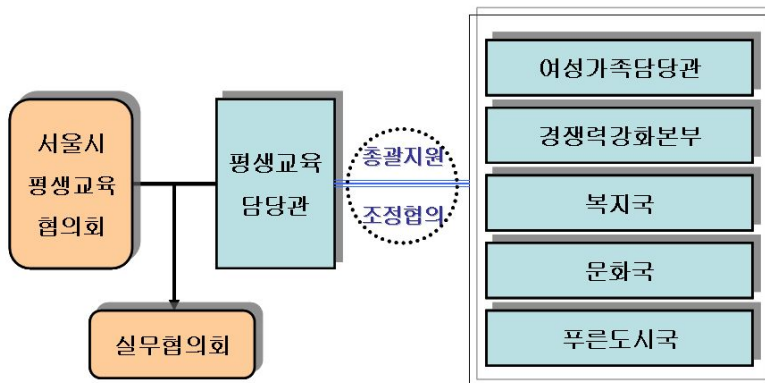
- 평생교육 수요층이 다양해지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, 여러 층을 참여시킬 방법의 강구가 시급함.
 - 학교교육에서만 아니라 평생교육에서도 계층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것을 암시함.
- 주 요구 사항이 네트워크 구축, 정보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서둘러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사함.

V.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

1. 운영 개선 방안

1) 지원체제 정비 및 구축

- 평생교육 전담 조직의 기능 강화
 - 평생교육담당관은 평생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시킴.
 - 현재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 성격의 업무 중 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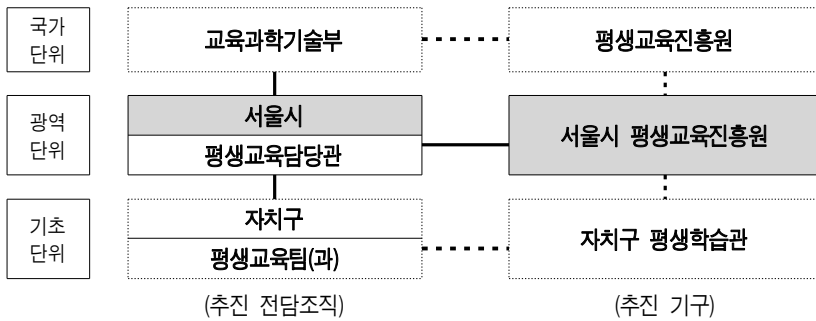
〈그림 2〉 평생교육담당관의 총괄 기능

평생교육담당관에서 추진 가능한 업무는 이관하여 추진하고,

- 유관 업무는 평생교육담당관이 총괄하여 부서 간 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과 효과 저하 등을 방지함.

○ 평생교육 추진기구(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) 설립

-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,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 및 자치구 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해 나가야 함.
-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, 담당자 연수 및 교육, 자치구 사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, 평생교육 관련 기초 조사 실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,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중심의 추진체계를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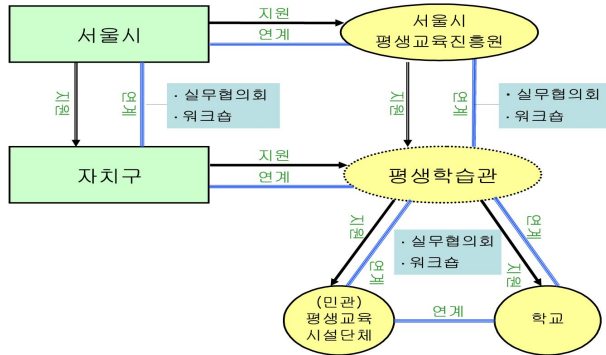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3〉 서울시 평생교육 지원체계

2)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

- 서울시와 자치구 간, 자치구와 자치구 간, 자치구 내 평생교육 관련 시설·기관 간, 서울시와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.
- 인적, 사업, 공간, 정보 네트워크 구축
 -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
 - 실무자협의회 구성·운영과 지원

-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을 구축·가동
 - 시설, 프로그램, 사업, 강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관 간 또는 시와 시민 간 소통 통로로 작용하도록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여 네트워킹을 강화



<그림 4> 서울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도

2. 정책제언

-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
 -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통합해 나가되, 장기적으로는 평생교육,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행정부서의 통합 추진이 필요함.
- 자치구 평생교육 지원 강화
 -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.
 - 시설 간 격차에 대한 지원 : 평생학습관 건립비 등 지원
 - 재정 격차에 대한 지원 :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시에서 추진함.
 - 자치구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기초조사 실시 및 자치구 특화 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.